

허가나 승인 그리고 권한의 집중을 통해 관리되어 왔다. 하지만 분권체제에서는 사전적인 제한을 최소화하면서 사후적인 평가기능을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재정관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한 재정평가장치가 설계되어야 한다.

최근의 정부혁신체제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통제 및 관리 지향적 재정평가에 국한하지 않고 지자체간 재정운영의 효율경쟁을 유도하여 결과지향적인 재정성과가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분석과는 별도의 평가장치를 마련하여 재정(관리)이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 벌주기 방식(소극적 네거티브 접근)뿐 아니라 우수 지자체 부각과 지자체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체감도가 높은 상 주기 방식(적극적 포지티브 접근)을 개발 적용해야 한다. 재정운영이 방만하고 재정성과가 취약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기구를 통해 객관적인 성과분석자료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에 대해 일차적인 소명작업을 거쳐 “건전재정이행계획서” 요구 여부를 판단하고 이행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자율학습 및 지식지원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정부간 재정관계구조에서 성과계약체제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방재정 분석 수준을 넘어 분석결과를 재정평가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통합적인 재정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내부수용 및 평가의 정당성 쟁점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평가기능을 강

화할 경우, “평가”의 특성상 재정관리 및 재정여건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이 차등화 되어야 하는데, 재정형평성 측면에서 쟁점도 제기될 수 있다.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는 자체적인 재정관리 노력보다는 지역 사회 경제적 특성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자체들이 쟁점을 제기하면 평가와 인센티브 강화의 정당성이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비교평가를 위해서는 여건이 유사한 지자체들을 유형화하고 동일 유형 내에서 재정상황이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형화의 기준으로서 인구, 지역경제(산업)구조, 재정력지수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전국의 지자체 수가 지역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유형화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유형화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평가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간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

VI. 지방재정분석체계의

개선방안

1. 제1안: 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진단 장치로 활용

재정평가장치를 통해 정부간 재정기능 연계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유도하고 재정성과에 대한 책임성 부여 기능이 충족